

삼성왕국 해체,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재용 구속은 시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433억 원의 뇌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청문회 위증 혐의다. 삼성그룹 창사 79년 만에 총수 구속은 처음이다. 천만 촛불의 쾌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에 걸친 광장 촛불로 사회의 어둠을 밝혔다. 갈팡질팡하던 국회를 움직여 탄핵을 가결시켰고, 김기춘을 비롯한 국정농단 부역자 일부를 구속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유전무죄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자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물론 이재용 구속은 우리의 최종목표가 아니며, 재벌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의 물주이자 몸통인 재벌권력에 이제야 접근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검은 거래를 일삼은 재벌은 '박근혜 체제'의 공동 주연이었다.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장이 만들어야 할 새로운 사회에서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들이 치른 대가 돌려받자

이재용이 최순실-박근혜에게 뇌물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경영권 세습과 노조 문제에 대한 청와대

협조였다. 로비를 했다는 건 합법·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삼성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치른 대가를 이제는 돌려받아야 한다.

우선,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주기적으로 헌정을 유린했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엔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손댔지만 유죄판결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삼성은 고액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빠져나가려 할 것이고, 재계와 보수세력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할 것이다.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이번에만말로 시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손해액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이재용은 8조원 이득을 봤지만 국민은 6천억 원을 손해 봤다.

나아가 노조 활동 보장이 필요하다. 익히 알려져 있듯 삼성은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 이번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권력의 협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오죽하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두 명이나 노조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겠는가.

삼성과 관련된 노동자는 원·하청과 간접고용을 통틀어 100만 여명에 이른다. 삼성은 수직적 하청구조를 통해 이익은 위로 집중시키고,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해 노동자들을 극단적으로 착취해왔다. 하청구조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다. 작년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메탄올에 중독되어 실명한 파견노동자들처럼 말이다. 이러한 착취구조를 뒷받침 해온 것이 무노조 경영이다. 삼성의 이윤독점과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조활동 보장이다.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다

비정규직 양산, 소득 격차, 무노조 경영, 원·하청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죽이기 등 노동자 서민을 괴롭히는 경제 문제 중 재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범죄자를 처벌한 다음에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촛불이 끈질기게 해나가야 할 과제다.

첫째, 이재용 없는 삼성은 가능하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을 책임질만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다. 족벌이 지배하는

거대 기업집단은 국민 경제에 해가 될 뿐이다. 이재용의 불법 경영권 세습을 막자.

둘째, 국민들이 삼성을 통제하자. 따져보면 삼성그룹은 탄생부터 박정희 정권의 각종 특혜 정책을 받았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든 삼성을 이씨 가문의 사유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은 1퍼센트도 되지 않으며 이진희 지분을 합법적으로 상속해도 직접적 지분은 4퍼센트 내외이며, 계열사 우호 지분도 4~9퍼센트 정도다. 현재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총수일가 지분을 합친 것보다 두 배 많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청와대와 정부의 외압 하에 족벌경영의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동자를 위한 삼성, 노동조합이 존중되는 삼성을 만들자. 전체 노동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삼성 무노조 경영의 횡포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이것부터 바꾸자. 하청노동자에게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노조가 늘어날 수 있다. 나아가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을 현실화하자.

이재용이 구속된 지금, 삼성왕국 해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

촛불 열망 역행하는 대권 레이스

기나긴 겨울이 끝나간다. 하지만 다가오는 봄은 안개로 가득하다. 야권 정치인 중 길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이들도 있다. 촛불에 역행하는 대권 레이스가 되는 건 아닌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 지속적으로 귀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광장의 외침은 거짓말과 협잡으로 통치하던 권력의 성벽을 흔들었다. 시민을 '개, 돼지'로 여기고 굴종시키는 체제를 끝내자 했다. 공안 통치와 정경 유착으로 얼룩진 정치, 평화를 위협하는 체제를 바꾸자 했고,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재벌 체제를 없애고 했다.

거꾸로 가는 대권 레이스

작금의 대권 레이스는 이런 열망을 담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 대권주자들은 촛불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뿐, 퇴진행동의 적폐 청산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재벌 체제 타파에도 소극적이다. 부자애엔 더 많은 부를,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신자유주의 정책도 폐기할 생각이 없다.



보름 전 안철수 의원은 '촛불 보이콧'을 선언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이란 말을 덧붙였지만 '중도층 공약을 위한 우향우'란 분석이 많다.

촛불 집회엔 출석하지만, 정책과 대안이 우려스러운 이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직 인사 60여 명을 포함하는 '10년의 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10년'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겐 '좋았던 시절'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겐 빼앗기고 짓밟힌 시간이었다.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이 됐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만들어졌다. 삼성 장학생들이 고위직을 장악하는가 하면, FTA,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 확장 등 실망스러운 일도 잦았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대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한편으론 보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해'로 치부하며 이중플레이를 펼쳤다. 민주주의를 농단한 자들이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천만 촛불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선언이었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했던 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

이었다. 촛불의 열망은 민주주의의 농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지, 정치세력 간 타협에 있지 않다.

촛불의 열망을 잊지 말자!

대권 주자들은 국정교과서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드 배치, 규제프리 존특별법 등에 많은 부분에서 입장차가 미미하다.

시민을 '개, 돼지'로 여기고, 빈곤과 실업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재벌 체제, 전쟁 위협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의 열망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 스스로 삶과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대선 정국이 이러한 꿈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

특검 연장과 부역자 처벌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대권 주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촛불의 진의를 곡해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 ●

재벌체제 해체 없는 재벌정책 대권주자들은 촛불민심 대변할 자격 있나?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촛불민심을 대변한다고 자임하지만 재벌체제 해체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벌개혁정책을 요약하면 재벌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는 유지하면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유사한 관점에서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재벌체제해체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벌 전횡을 견제하고 재벌체제 해체로 나가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인 노조할 권리의 획기적 강화도 빠져있다.

재벌체제의 시너지는 없다

우리는 재벌체제가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단적으로 삼성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보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거래가 매출의 5%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내부의

시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언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어떠한가? 상사와 건설 사업을 하던 삼성물산과 패션, 식품유통, 리조트 사업을 하던 제일모직을 합병해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합병 이후 사업부간 매출도, 공동사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영승계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재벌체제 해체, 촛불이 하자

재벌체제의 유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한 시너지 말고 다른 긍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재벌체제 자체가 국정농단을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이 재벌체제 해체로 나가지 않는다면 재벌 적폐 청산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며 촛불을

대변한다고 자임할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과 여당은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나, 감사이사 분리 선출과 같은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게다가 재벌총수 처벌여론이 높아지자 재벌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

대적인 투자와 고용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벌체제를 위한 과제를 대선 후보들과 차기 대통령에게만 맡겨둔다면 정치적, 경제적 핑계로 좌초되었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크다.

재벌체제 해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촛불의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 ●

사회운동의 미래를 개척하는 팔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 함께 나아갑시다.

월간 <오늘보다>를 구독하세요!

오늘보다

2

정기구독료 연 4만원 / 월 4천원
하나은행 771-910262-87007 정영선

✉ today.boda@gmail.com
🌐 todayboda.net/subscribe
☎ 02-778-4001

※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단체구독 환영